

국회 37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

자동 부의 조항 첫 적용...처리 시한 준수여부 관심

여야, 4대강 사업·청와대 헬스기구 구입 내역 공방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총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예산안 예결위 처리시한인 11월30일까지 남은 시한은 25일에 불과, 어느 때보다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 적용 원년인 올해는 반드시 처리 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으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지방에서부터 불거진 '무상보육 논란'을 둘러싸고도 새누리당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권은 특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박근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예결위 첫날 회의에서부터 야당은 정부의 주요 예산을 놓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새정치연합 이준진 의원은 "혈세 먹는 하마인 4대강 사업에 세금으로 6년 동안 이자만 1조6천억원을 지급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헬스기구 구매 내역을 거론하며 거둬 추궁을 이어갔다.

반면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정부 대책을 묻는 정책질의를 벌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에 출석해 "정부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로 가계 기업 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 재정 편성에 대해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이 우선"이라며 "내년 예산이 하루 빨리 처리돼 경제 활

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서민생활 안정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 본격적인 예산부수법 심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린다는 복안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사업비의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3법’ 오늘 본회의 일괄 처리될까

세월호특별법·유병언법 각각 상임위 통과...정부조직법만 막판 난항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이 6일 국회 상임위를 각각 통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의 처리시한인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은 야당이 법안이 실효를 갖게 되는 시행일을 문제삼으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7일 오후 본회의의 처리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세월호법 제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켜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병언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 법안과 함께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을 7일 전체회의에 한꺼번에 상정해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에서의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돼 막판 결림돌이 되고 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에

서 시행일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후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국회 예산 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2일 이후인 12월3일을 법 시행일로 하든지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정예산안을 마련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밟느라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을 불가피하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므로 '선(先)조직(後)예산' 원칙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위공무원 2213명 전원에

‘연금개혁’ 서명 요청 논란

정부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공무원연금개혁 동참 서명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에서는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 221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동참 서명문'에 서명을 요청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정무직 116명과 고위공무원단 1274명,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82명,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14명, 자치단체 정무직 243명과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 484명이다.

안행부는 이날 각 부처 장·차관과 자치단체장에게 중앙부처는 10일 정도까지, 자치단체는 14일까지 서명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이 서명 대상자와 서명 동참자를 집계해 현황을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안행부는 결과를 취합,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발전은 위해 헌신한 공직자로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국가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개혁에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직도 아닌 일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기관별 실적 비교까지 하며 서명문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반강제적인 서명 요구나 다름없는데다 개혁의 취지에 찬성하는 공직자와 국민으로부터도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반강제 서명' 논란과 관련, "서명 여부는 철저히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자치단체장의 성향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연령도 연장하여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희호 여사 방북 본격 추진

정부, 북 주민 접촉 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어제 김대중평화센터가 이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고

요건에 부합해 신고를 수리했다"며 "방북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향후 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방북 신청이 접수되면 적절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중평화센터는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받음에 따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팩스 교환 방식으로 방북 시기 등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과 팩스, 서신

교환 등 간접적 방식의 의사 교환을 할 때도 통일부로부터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방북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여사님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북측도 지난 8월 김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화환 전달 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이 여사 방북) 초청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히 이 여사의 방북 성사 가능성은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희호 여사 측은 통일부의 접촉 승인에 따라 조만간 북한 당국과 연락해 구체적인 방북 일정과 형식, 인원 등의 세부 내용을 조율기로 했다.

/연합뉴스

NAVER *전국상생에 단비플라워를 추천합니다*

단비플라워

죽아와환3단

근조와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361-8111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 법 백 현 학개론 임진택 공 법 이강열
중개법 홍덕기 공시법 안규체 세 법 임기원

개강 11월10일 주부반 11월~12월 7교과정전과목 강의 합니다.
성인반 인터넷 동영상수업은 무료

합격률 1위 선행과목이 추천한 1등학원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민원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력 1위

합격을 위한 새롬만의 차별화된 시스템

합격을 위한 핵심강의와 모의고사
기초반-11월~12월 7과목-1월~2월 5과목
개설시 1-1월~2월 5과목-2월~3월 5과목
2과목-3월~4월 5과목-4월~5월 5과목
매월 1등 장학금 지급합니다.

“새롬” 전국 수석합격자 2명 배출

광주새롬학원에서 제 15회~제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직업상담사 특강(주·야)

학원홈페이지 한글주소 검색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학원카페 다음카페 검색창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새롬 행정고시학원 광주 본원 농협 서구청앞광주은행2층
☎361-8111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쏙쏙!!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청구송금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해당해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주유소사업소 720-288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